

## 절합된 (비-)경제적 관행의 공간과 사회적 재생산: 북한 시장화에 대한 경제지리학적 접근

김부헌\* · 이승철\*\*

### Spaces of Articulated (Non-)Economic Practices and Social Reproduction: Economic Geographical Perspective to the Marketization in North Korea

Boo-Heon Kim\* · Sung-Cheol Lee\*\*

**요약** : 본 논문은 북한 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심층 면담 결과를 활용하여 북한 내 여러 경제주체들이 경제 위기에 어떻게 대응해왔고 이를 통해 나타나는 다양한 경제관행들이 공간성과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은 북한의 시장화를 경제지리학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길들이기’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북한의 시장화를 이해할 때 우리는 시장화를 헤게모니 권력을 갖는 거대 프로젝트로서 ‘저편에 놓여 있는’ 무엇이 아니라 공간 내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일상생활의 관행을 통해 끊임없이 (재)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경제적 위기와 파열, 경제적 주변화에 대한 경제주체의 대응전략은 경제와 비경제가 절합되어 있는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일상생활의 다양한 대응전략이 경제적, 비경제적 요인들에 의해 중층결정되어 있으며 관행의 효과성은 권력관계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강조한다.

**주요어** : 북한의 시장화, 길들이기, 일상생활의 관행, 절합, 사회적 재생산

**Abstract** : The paper aims to identify how North Korean various economic agents respond to the economic crisis in North Korea, and how these multiple practices are entangled with its spatiality by through the questionnaire survey and in-depth interview targeted at North Korean refugees. The paper argues that it needs to examine the marketization in North Korea in terms of the domesticating recently debated in economic geography. In this perspective, the marketization in North Korea could be explained not as a grand project ‘out there’ with hegemonic power, but as various economic agents within their space are constantly (re)constructed through everyday life practices. Economic agents’ responses to economic crisis, economic rupture, and economic marginalization could be identified in terms of articulation between economic and non-economic factors. More specifically, the paper emphasizes everyday life responses are over-determined by their economic and non-economic factors and its effectiveness is differentiated by

---

본 연구는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NRF-2016S1A5A2A03926463)을 받아 수행되었음.

\* 동국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박사 수료, 월계고등학교 교사 (Doctoral candidate, Graduate School of Geography, Dongguk University-Seoul campus; Teacher, Wolgye High School, owlman78@hanmail.net)

\*\*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교수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Dongguk University-Seoul campus, leesc@dongguk.edu)

their power relations.

**Key Words** : marketization in North Korea, domesticating, everyday life practices, articulation, social reproduction

## 1. 서론

최근 학술적인 차원에서 북한에 관한 관심은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2002년부터 2019년 11월까지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Korea Citation Index)에 등재된 논문들의 키워드별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북한’을 키워드로 발표된 논문 총 1,283편 중에서 약 70%가 2011년 이후에 발표된 논문들이다. 특히, 2002년 한해 불과 15편에 지나지 않았던 ‘북한’ 논문은 2014년부터는 매해 100편 이상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한국학술지인용색인 사이트). 이러한 분위기에 조응하듯, 최근 지리학계에서도 북한 및 통일 관련 주제로 각종 연구와 발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다음은 볼 것, 이민부·김걸, 2016; 이승욱, 2016; 정현주, 2018). 특히, 작년 6월에 열린 대한지리학회 연례학술대회 특별 세션에서는 ‘지리학, 평화의 지도를 그리다’란 주제로 여러 편의 연구가 발표되었고, 11월에 열린 지리학대회의 슬로건은 ‘한반도의 봄, 지리학의 도전(Dawn of a New Era in the Korean Peninsula, the Challenge of Geography)’이었는데, 이들은 모두 변화된 한반도의 지정학적·지경학적 담론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본 논문도 이와 같은 지리학적 관점의 북한 연구 필요성과 활성화에 공감하면서 북한의 시장화에 주목하고자 한다.<sup>1)</sup> 우선 본 논문이 북한의 시장화에 특별히 주목하는 이유는 시장화를 빼놓고서는 오늘날 북한의 모습을 제대로 규명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북한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기(Arduous March)’라고 불리는 극심한 경제위기를 겪은 이

후, 공식적으로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the July 1st Measures)를 통해서 국가 사회주의 계획 경제 체제 안에서 부분적인 시장경제활동을 제도적으로 허용해주고 이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윤영관·양운철 편, 2009; 양문수, 2010; Kim, B.-Y., 2017).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북한의 시장화 연구는 주로 정치학과 경제학을 전공한 학자들이 주도해왔다(대표적인 연구로는 다음을 볼 것, 윤영관·양운철 편, 2009; 양문수, 2010; 박순성·홍민 편, 2010; 김병연·양문수, 2012; 홍민·박순성 편, 2013; Kim, B.-Y., 2017). 주류 북한 연구자들은 북한에 관한 관심이 소홀하던 시기에도 이렇듯 아니고 다양한 주제의 북한 관련 연구들을 수행해왔다. 이들이 하나씩 쌓아 올린 연구 성과들은 우리와 같은 후발 연구자들이 북한 연구를 시작할 때 훌륭한 길잡이가 되어 준다는 면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렇지만 주류 북한 연구자들에 의한 기존의 북한 시장화 연구는 ‘공간성(spatialities)’의 규명에 있어서 한계를 갖는다. 주류 북한 연구자들이 정치학, 경제학을 전공한 학자들이다 보니 지리학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간’을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주류 북한 연구자들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기’부터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가 등장하기 전까지 북한의 변화를 ‘자생적인 시장화’로 설명하고 있는데(정은이, 2009; 광인옥·문형남, 2017), 비록 ‘자생적’이라는 틀이 로컬 주체의 역량에 주목할 수 있도록 해준 점은 긍정적이지만 경제주체 스스로 변화를 주도해간다는 ‘자생적’이라는 틀이 과연 어느 정도로 당시의 변화를 정확하게 그려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홍민, 2010:

358). 오히려 ‘자생적’이라는 틀은 외부의 힘과 내부의 힘 간의 상호 구성적 역할을 간과할 우려가 클 뿐만 아니라, ‘자생적’이라는 틀이 경제문제에 따른 빈곤과 내핍의 위험에 대응하는 ‘생존전략(survival strategies)’을 강조하다 보니 실제로 나타났던 다양한 현상의 원인들을 먹고사는 문제로만 환원시키는 문제가 있다(이와 관련하여 다음을 참조할 것. Smith, 2002: 233). 또한, 경제학으로 훈련받은 주류 북한 연구자들은 공식 경제와 비공식 경제, 그리고 시장과 비시장을 이분법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대표적으로 다음을 볼 것. 김병연, 2009; 양문수, 2010; 김병연·양문수, 2012; Kim, B.-Y., 2017), 이러한 관점은 실제 북한의 시장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채로운 경제(multicoloured economies)가 차별적인 사회 및 지리의 맥락 속에 항상 이미 서로 절합되어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는다(이와 관련하여 다음을 참조할 것. Smith and Stenning, 2006: 194). 최근에는 북한 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이 가능해지면서 주류 북한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 관행에 초점을 둔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박순성·홍민 편, 2010; 홍민·박순성 편, 2013), 관행이 일어나는 공간적 맥락에 주목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이들 공간을 관행이 ‘발생하는(take place)’ 배경 정도로 간주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 더구나 이들 주류 북한 연구자들은 북한 주민들의 관행을 체제에 저항하려는 평범한 일상생활의 소리 없는 저항이나 속삭임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컸다.<sup>2)</sup> 하지만 경제주체들의 다양한 관행이 체제 저항적인 성격만을 갖는 것은 아니다.

결국 북한 시장화 연구를 둘러싼 핵심 쟁점은 ‘시장화(marketization)’를 어떻게 이해하고 개념화할 것인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북한의 시장화를 단순히 공식경제인 계획경제에 대립되는 비공식적인 영역으로, 또는 시장 활동을 촉진하는 일련의 정책 및 제도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공식경제와 비공식경제,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와 같은 이분법적 틀로는 현실의 다양성을 포착해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장화를 외부에 놓인 권력을 갖는 자에 의해서 추진되는 하나의 거대 프로젝트(grand project)로 간주하게 되면 시장화에 따른 변화가 공간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규명해내는 데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 인식 속에서 본 논문은 북한의 시장화를 ‘길들이기(domesticating)’ 관점을 통해서 바라보고자 한다(Creed, 1998; Smith and Rochovská, 2007; Stenning, Smith, Rochovská, Świątek, 2010). 길들이기 관점을 채택하게 되면 북한의 시장화는 시장화 관련 정책이나 제도가 하향식으로 확장되는 하나의 거대 프로젝트가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평범한 일상생활의 관행을 통해서 시장 관련 정책이나 제도를 감당할만한(tolerable) 수준으로 길들이는, 다시 말해서 외적인 힘이 로컬의 투쟁을 통해서 교섭되고 (재)구성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Smith and Rochovská, 2007: 1164–1166). 북한 시장화에 대한 이와 같은 관점은 일상적 수준에서의 다양한 관행들이 경제적·정치적·사회적인 측면들과 어떻게 절합되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며, 한편으로 이와 같은 관행들이 어떻게 ‘시장화’를 (재)구성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제기해야 할 질문은 과거에 부재했던 시장 관계가 왜, 언제, 어떻게 등장했는지가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다양한 경제적 관행이 어떻게 공간을 (재)구성하고 있는지 질문해야 한다.<sup>3)</sup> 이점이 바로 북한 시장화를 경제지리학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시작점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북한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제·사회적 관계의 변화, 곧 시장화를 ‘길들이기’ 관점에서 규명하는 데 있다. 비록 북한의 시장화는 국가 사회주의 계획 경제체제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하

는 포스트 사회주의 체제전환(post-socialist system transformations)과 달리 사회주의 말기(late socialism)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체제 보장적 성격의 개혁에 가깝지만(박제훈, 2009: 28, 30-31), 사회주의 말기에서 나타나는 시장 관계들은 다중적인 장과 공간 안에서 역동적이며 복잡한 방식으로 서로 절합된 경제적 관행들의 집합을 창출하고 있다(Smith and Stening, 2006: 191).

논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우선 2장에서는 북한 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 방법을 소개한다. 3장은 본 논문에서 활용한 여러 가지 이론적 개념들을 소개하는 장이다. 먼저 경제주체들의 다양한 관행을 어떻게 공간적으로 이론화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고, 이어서 ‘길들이기’와 다양한 경제들 간의 ‘절합’을 논의한다. 4장 1절에서는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북한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제도 변화와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4장 2절에서는 북한의 여러 경제주체들의 다양한 길들이기 관행을 심층면담 사례를 통해서 분석한다. 특히 해당 절에는 북한 내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경제위기에 어떻게 대응해왔고 이를 통해 나타나는 다양한 경제관행들이 공간성과 어떻게 얽혀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규명하였다. 끝으로 5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본 연구가 갖는 공간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 2. 북한 이탈주민 대상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 방법

본 논문 작성을 위해 북한 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과 구조화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우선 2018년 5월~7월 사이에 북한 이탈주민 13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하였고, 2018년 8~10

월 사이에는 북한 이탈주민 71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논문은 이렇게 확보된 자료 중에서 북한의 시장화와 일상생활의 관행 차원에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선택하여 활용하였다.

북한 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기반을 둔 기존의 북한 시장화 연구로는 이영훈(2007)과 김병연(2009), 김병연·양문수(2012)의 연구 등이 있다. 이영훈(2007)의 연구는 1997~1999년과 2004~2006년에 탈북해서 우리나라로 입국한 219명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여 북한의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전과 이후의 변화상을 파악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서 북한 내에서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로 계획경제 부문이 축소되고 시장경제 부문이 어느 정도 진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병연(2009)의 연구는 주로 1997~2004년에 탈북해서 우리나라로 입국한 700여 명을 대상으로 북한에서의 시장화 정도를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는데, 이는 지금까지 북한 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시행된 조사 중에서 가장 큰 표본 수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이다. 한편 김병연·양문수(2012)는 기존 연구들이 2004년 이전 북한 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2000년대 중반 이후 북한에서의 시장화가 어느 정도로 진행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김병연(2009)의 연구와 시계열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2007~2008년 북한 이탈주민을 200여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 표본 대상자 수는 71명으로 기존 연구와 비교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울 정도로 표본 수가 적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비교적 최근에 북한을 떠난 이탈주민 13명을 대상으로 면대면 심층조사를 실시하였다.<sup>4)</sup> 한편 설문 문항은 기존의 북한 연구자들의 설문 조사 방법을 참고하여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하였다(김병연·양문수, 2012; 임강택, 2013; 곽인옥, 2017). 설문 문항은 주로 설문 대상자 기초자료(출생연도, 탈

북연도, 성별, 북한 근무 직종, 최종 학력)와 전체 소득에서 계획 부문과 시장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에 관한 질문, 식량과 생필품 확보 경로에 관한 질문, 소속되어 있던 근무지에 관한 질문, 부업 및 시장 활동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심층면담 대상자를 포함한 설문 조사 대상자의 북한 거주 기간(출생연도부터 탈북연도까지의 기간)을 살펴본다. 조사에 참여한 북한 이탈주민 전체 84명의 출생연도 분포는 1943년부터 1995년까지로 평균은 약 1972년이다. 그리고 탈북연도 분포는 2001년부터 2018년까지로 평균은 약 2011년이다. 1990년대 태어난 일부 설문 조사 대상자들은 1990년대 경제위기인 고난의 행군기와 2000년대 북한의 경제변화를 체감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대부분의 설문 조사 대상자들은 이 시기를 몸소 체험한 세대이다. 아울러 심층면담 대상자들은 1956년부터 1980년 사이에 태어나서 2005년부터 2016년 사이에 북한을 떠났기 때문에 면담을 통해서 1990년대 경제위기인 고난의 행군기와 2000년대 북한의 경제변화에 관한 깊이 있는 답변을 확보

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활용된 설문 조사 결과는 북한의 시장화와 그에 따른 다양한 관행을 파악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조사에 참여한 북한 이탈주민 84명 가운데 남성은 26명, 여성은 54명, 성별을 밝히지 않은 응답자 4명으로 여성 응답자의 수가 많았다. 그리고 탈북 당시 거주지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84명 가운데 43명(약 51%)이 함경북도, 19명(약 23%)이 양강도, 8명(약 10%)이 평양직할시, 5명(약 6%)이 함경남도, 3명(약 4%)이 평안북도, 2명(약 2%)이 황해북도, 나머지 4명은 각각 황해남도, 자강도, 평안남도, 무응답으로 나타났다. 함경북도와 양강도 출신 응답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데 함경북도에서는 회령 출신(14명), 양강도에서는 혜산 출신(15명)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sup>5)</sup>

심층면담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sup>6)</sup> 심층면담 대상자 13명 가운데 남자는 6명, 여자는 7명이다. 지역별로는 양강도 혜산시가 3명으로 가장 많았고, 함경북도 회령시와 평안북도가 각각 2명으로 그 뒤를 따른다. 북한 내 주요 경력은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에서부터 기업소 직원, 무역일꾼, 교사, 장마당 활동 등으로 다양하다. 본 논문에서 심층면담 대상자의 면담내용을 활용할 경우, 표 1의 구분에 제시된 것과 같이 A씨, B씨 등으로 지칭하고자 한다.

표 1. 심층면담 대상자의 인적 사항

구분	성별	주요 거주지	주요 경력
A씨	여	양강도 혜산시	교사, 장사
B씨	남	평안북도	기업소 근무
C씨	남	평안북도	국가무역 기관
D씨	남	함경북도 회령시	보위사령부 근무
E씨	남	-	-
F씨	여	황해북도 사리원	수출피복, 장사
G씨	남	평양시	국가기관 근무
H씨	여	양강도 혜산시	피복가내수공업
I씨	여	함경북도 청진시	군부소속 무역일꾼
J씨	여	함경북도 나선시	기업소 부기, 천 대방
K씨	남	황해남도	도인민위원회 근무
L씨	여	양강도 혜산시	교사, 무역일꾼
M씨	여	함경북도 회령시	협동농장

주: - 표시는 '무응답'을 의미

### 3. 관행의 공간적 이론화와 길들이기, 절합

이 장에서는 관행(practices)과 길들이기(domesticating), 절합(articulation)이 본 논문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사회주의 말기의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려는 방안으로 등장한 북한의 시장화는 이전 시기의 사회적 관계와

복잡하게 절합된 다채로운 경제를 형성했다. 북한의 시장화 이후의 다채로운 경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관행의 절합과 지리들(articulations and geographies of economic practices)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1) 관행의 공간적 이론화

관계론적 경제지리학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들<sup>7)</sup>에 대한 부분적 반응으로 최근에는 ‘관행(practice)’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Jones(2014: 610-611)는 관계론적 경제지리학 내에서 “경제적 행위 주체들 간의 관계를 포섭하는 행위성의 본질(nature of agency)을 파악하고 구체화하는 훌륭한 수단으로써 관행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본 연구는 관계론적 경제지리학 내에서 발전한 여러 관행-지향적 접근들 중에서 개인 및 집단 수준의 스케일에서 다양한 생계(diverse livelihoods)와 가계 경제(household economies), 일상생활 관행들의 관계성을 이해하는 틀을 이론화하는 데 주목한다. 특히, 본 연구는 포스트-사회주의 체제 전환의 맥락에서 공식 경제와 비공식 경제, 시장과 비시장 간을 연결하는 가계의 식량 생산과 송금, 호혜성, 돌봄 등과 같은 관행의 중첩된 지리들(nested geographies of practices)에 주목한다(이와 관련하여 다음을 볼 것. Smith and Stenning, 2006; Stenning *et al.*, 2010: 64; Yarker, 2017: 5).

관행은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반복적으로 참여하는 평범한 행동으로 인간 활동의 다양성과 혼합적 특성(diversity and mix of human activities)을 탐구하기 위해 최근 사회과학 연구에서 강조되어 왔다(Yarker, 2017: 3; Stenning *et al.*, 2010: 59). 가장 기초적인 측면에서 볼 때, 관행에 대한 연구는 사람들이 무엇을, 왜,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그런데

한편으로 그러한 사람들의 행위 안에는 체계적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이익이나 욕구, 책략(ruses)이 숨어 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행위 안에는 강력한, 구축된 질서가 강요하는 생산물이나 재현, 활동들을 재활용하거나 전복시키려는 욕구가 내재되어 있기도 하다. 관행은 다중적인 논리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얼핏 보면 비합리적일 수 있지만 관행을 분석함으로써 모든 경제조직 형태에 내재된 복잡성과 우연성, 정체성, 의미를 밝혀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Yarker, 2017: 3; Stenning *et al.*, 2010: 59-60).

Stenning 등(2010: 61-63)은 관행의 공간성을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첫 번째는 관행이 때때로 설정(setting) 안에서 조우하는 사람들과 사건들, 대상들을 향하고 또 이에 대응하기 때문에 관행이 인간 존재의 공간성(spatiality of human existence)을 이루고 있다는 견해며, 두 번째는 설정 안에서 조우하게 되는 특별한 규칙들, 패러다임, 사상 등은 사람들이 하는 일의 의미 있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는 입장이다. 전자는 관행을 공간 위에서 펼쳐지는 사회적 관계(social relations)로 이해하며, 따라서 관행이 공간을 구성한다고 본다. 공간은 여러 관행들의 집합인 셈이다. 후자는 그와 같은 관행들이 어떤 준거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설명한다.

그동안 북한 시장화와 관련한 관행에 관한 연구에서 공간은 단순한 장(site)이나 설정(setting) 정도로만 간주되어 왔다. 하지만 관행을 공간적 관점에서 이론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간 또는 중첩된 지리들(nested geographies)이 관행을 촉진하거나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와 같은 관행들이 어떻게 다시 공간성(spatiality)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점에서 Stenning 등(2010: 62)이 제시한 관행의 공간성의 두 번째 측면인 ‘도덕적 합리

성(moral rationalities)’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Stenning 등(2010)은 관행을 심도 있게 연구해온 지리학자인 Theodore Schatzki(1996)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무엇이 도덕적으로 옳고 사회적으로 채택될 수 있는지에 관한 집합적 교섭 및 이해인 도덕적 합리성은 지리·역사적으로 절합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사람들이 행동할 때 따르는 기준, 규범 등이 공·시간적 맥락(spatio-temporal context)에 따라 다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행동을 통해 형성한 공·시간적으로 차별적인 기준, 규범 등은 사후적으로 검증받는다라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서 관행은 도덕적 합리성을 따르지만 동시에 관행 스스로가 도덕적 합리성을 형성한다. 그렇다면 관행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이에 관한 지리학자 Roger Lee(2006)의 연구는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준다.

Roger Lee(2006)는 마르크스의 자본 순환 도식을 토대로 관행을 가치의 생산, 교환, 소비의 지속적인 순환으로 이해한다(Lee, 2006: 417에 제시된 그림 1을 참조할 것.). Lee는 Eric Sheppard와 Trevor Barnes(1990: 32-41)의 논의를 인용하면서 ‘특정 장소와 시대에서 생산된 가치의 총량 및 질’이 ‘특정 장소와 시대에서 지속적 가치 순환을 필요한 가치의 총량 및 질’보다 클 때 가치 순환은 지속될 수 있다고 보았다. 곧 사람들은 삶과 생계를 재생산하기 위해서 가치 순환 과정에 참여하는데, 이때 사람들은 주어진 공·시간적 맥락에서 자신의 삶과 생계, 생존을 위해 필요로 하는 양적·질적 가치의 총량보다 더 많은 가치를 생산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또한, 여기에서 말하는 가치가 지리·역사적으로 절합된 물질적·비물질적 가치 모두를 포괄하기 때문에 관행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물질적 성공만이 중요하지 않고 특정 경제지리(particular economic geographies)를 구성하는 다중적인 가치 순환 및 네트워크를 통해서 산출된 가치관(values)도 중요하다는 점을 의미한다(Lee,

2006: 415).

결국 우리는 관행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사회적 재생산(social reproduction)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재생산에 주목함으로써 우리는 관행이 어떻게 노동력을 유지하고 생산이 가능하도록 일상 존재의 물질적·비물질적 조건을 재생산하는 방향으로 조직하고 있는지, 그리고 관행이 어떻게 경제 주체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켜줄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해 잉여 가치를 생산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Stenning *et al.*, 2010: 77-79).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우리는 그동안 관행을 생존 전략(survival strategies)으로만 이해하던 틀에서 벗어날 수 있다.<sup>8)</sup>

## 2) 길들이기

본 연구는 북한의 시장화를 길들이기(domesticating)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길들이기 관점은 기존 북한의 시장화 연구에서 강조되던 자생적 시장화(自生市場化)가 갖는 한계뿐만 아니라 자기 조정적 시장(self-regulating market)이 갖는 환상 또한 극복할 수 있도록 해준다.

길들이기 개념은 원래 동물을 길들이어서 가축화하고, 식물을 재배하는 것과 같이 야생의 대상을 온순하고 안전하게 만든다는 의미인데, 여기에는 어떤 외적인 존재를 내적으로 친밀하게 사적인 공간과 통합시키는 통제와 전유(control and appropriation) 관념이 포함된다(Stenning *et al.*, 2010: 73). 사회과학에서 길들이기 개념은 문화인류학자 Gerald Creed(1998)의 연구로부터 도출되었다. Creed는 불가리아 마을을 사례로 공산주의가 교섭되고 구성되는 방식들을 탐구함으로써 국가 사회주의의 건설과 같은 거대한 경제·사회적 과정들은 항상 이미 로컬하면서도 가내적인 프로젝트(local and domestic projects)이며, 이와 같은 과정들은 평범한 일상의 관행을 통해 매개되어 마을 사람들이 감

당할 수 있는 것(tolerable)으로 변형되었음을 주장하였다(Smith and Rochovsk, 2007: 1165-1166; Stenning *et al.*, 2010 72-73).

이와 같은 길들이기 개념을 통해서 북한의 시장화를 파악하게 되면 우리는 북한의 시장화가 일상에서 어떻게 구축되고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서 북한의 시장화는 헤게모니 권력을 갖는 거대 프로젝트로서 '저편(out there)에 놓여 있는' 무엇이 아니라, 공간 내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일상생활의 관행을 통해 끊임없이 (재)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북한의 시장화를 연구함에 있어 길들이기 개념은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갖는다. 첫째, 길들이기는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 사이의 절합(articulation of the internal and the external)에 초점을 둔다. 길들이기는 내부와 외부 간의 병치(juxtaposition of inside and outside), 양자 간의 지속적인 교섭에 의존한다. 길들이기에서는 어떤 대상이 다른 것에 의해 재구성되는 방식이 중요하다. 그런데 길들이기는 로컬 주체의 입장에서 볼 때 전복적인 관행이지만, 외부의 제도는 헤게모니의 형태이다. 다시 말해서, 길들이기는 길들여지고(being tamed), 길들인다(taming)는 양면성이 통합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Stenning *et al.*, 2010: 74). 둘째, 길들이기는 곧 관행이다. 3장에서 관행의 공간적 이론화를 먼저 논의하고 다음으로 길들이기를 논의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길들이기는 경제주체가 외부의 정책과 전략, 기술을 일상생활 속으로 받아들이고 적용시키는 일련의 관행을 의미한다. 길들이기는 관행을 지속적인 교섭 과정과 자산, 가치, 지식 간의 변화무쌍한 조합(ever-changing combinations)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준다. 따라서 길들이기는 조화롭거나 선형적이거나 완결적일 수 없다(Stenning *et al.*, 2010: 74). 이는 공간의 발전 궤적 또한 미래에 대해 열려 있음을 의미한다(Massey, 2005). 셋째, 앞에서 제시된 함의와 어느 정도 중첩되는 측

면이 있지만, 길들이기는 누가 길들이고, 무엇이 길들여지는 지에 대한 경계를 흐리게 만들기 때문에 분석 대상의 범위를 더욱 넓게 확장해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준다(Stenning *et al.*, 2010: 74). 예를 들어, 가계 경제는 뚜렷한 영역성을 갖는 장이 아니라 여러 겹으로 이루어진 거미줄 모양의 결절이나 수많은 관계의 네트워크 상의 장소(locus)로 이해된다(Smith and Stenning, 2006: 202).

### 3) 절합

절합(articulations)은 원래 어떤 체제의 통일성(결정성)과 다양성(자율성)이 결합된 '복합적 통일성 속의 다양성'을 인식하기 위해 제시된 개념이다(임영호 편역, 스투어트 홀 저, 2015: 22).<sup>9)</sup> 본 연구가 절합 개념을 제시한 이유는 공식 경제와 비공식 경제, 경제와 비경제, 그리고 시장과 비시장을 이분법적으로 이해하려는 기존 북한 연구자들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이다(대표적으로 다음을 볼 것. 김병연, 2009; 양문수, 2010; 김병연·양문수, 2012; Kim, B.-Y., 2017). 예를 들어, 경제학으로 훈련받은 북한 연구자들은 북한의 시장화가 북한 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많았다. 이들은 구소련과 중동부유럽의 체제이행(transition)에 적용되었던 '비공식화의 가설(informalization hypothesis)'을 북한에 적용해보면서 북한 체제의 붕괴 가능성을 예측하기도 하였다(Kim, B.-Y., 2017: 33-34). '비공식화의 가설'에 따르면 사회주의 말기(late socialism)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비공식 부문인 시장 관계가 점차 성장하게 되면 공식 부문인 계획 부문이 침식되는데, 이와 같은 변화는 체제의 붕괴로 이어진다고 설명한다(김병연, 2009; 김병연·양문수, 2012: 16-17). 이와 같은 이해 속에서 공식 경제는 계획 부문, 비공식 경제는 시장 부문으로 구분되는데, 이들에 따르면 시장화란 경제 체제 내에서 비공식적 활동 부문이 증가하



는 것을 의미한다(김병연·양문수, 2012: 13-16). 이처럼 공식 경제와 비공식 경제, 경제와 비경제, 그리고 시장과 비시장을 이분법적으로 이해하려는 이분법적 시각은 실제 북한의 시장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채로운 경제(multicoloured economies)가 차별적인 사회 및 지리의 맥락 속에 항상 이미 서로 절합되어 있음을 인식하기 어렵다.

북한의 시장화를 절합의 관점에서 이해한다는 것은 공간을 일상생활의 다양한 관행들을 통해 전환되고 교섭되고 중재되는 탈중심화된 관점(de-centered view)으로 바라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차별적인 계급적 지위를 갖는 수많은 사람들은 상호 구성적으로 절합되어 다양한 기회와 가능성을 창출하고 있다. 따라서 상호 구성적이고 중층결정적인 탈중심화된 현실 공간을 보다 발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차별적인 경제적 관행들을 절합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Stenning *et al.*, 2010: 64-65; Smith and Stenning, 2006: 204). Gibson-Graham이 경제적 삶의 다양성을 그려내기 위해 ‘빙산의 비유’를 활용한 것처럼 북한의 시장화 역시 공식 경제 밑에 훨씬 더 다양한 비공식 경제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엄은희·이현재 역, 김순-그레엄 저, 2013). 물론 ‘공식 경제=계획 경제,’ ‘비공식 경제=시장 경제’라는 도식 또한 기각할 필요가 있다(이와 관련하여 다음을 볼 것, 김택현·안준범 역, 차크라바르티 저, 2014).

#### 4. 북한의 시장화와 절합된 (비-)경제적 관행 공간의 형성

이 장에서는 북한에서 나타난 사회주의 말기의 경제적 위기가 북한의 시장화를 초래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그리고 북한의 시장화는 중앙 집권적인 계획 경제 체제(공식 부문)와 시장 경제활동(비공식

부문)을 서로 절합시켰으며, 시장화 이후 북한의 경제지리(economic geographies in North Korea)는 더욱 다채롭게 변화되었다. 그렇지만 북한의 시장화는 헤게모니 권력을 갖는 거대 프로젝트로서 ‘저편에 놓여 있는’ 무엇이 아니라, 공간을 살아가는 여러 경제주체들의 일상생활 관행을 통해서 끊임없이(재)구성된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4장 2절에서는 북한 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 분석 자료를 통해서 북한의 시장화가 항상, 이미 일상의 관행을 통해 매개되어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변형되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 1) 북한 시장화와 사회·경제적 변화

1990년대 북한은 사상 유래 없는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고난의 행군기’로 불리는 1994~1997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기까지 했다(정은이, 2009).<sup>10)</sup> 북한 당국은 이러한 굶주림이 1990년대 중반에 발생한 자연재해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사실 이와 같은 굶주림은 자연적 요인이라기보다 구조적 요인 때문에 발생한 것이었다(Kim, B.-Y., 2017: 48). 그림 1 북한의 국민총소득과 경제성장률의 변화(1990~2018년)를 보면, 1990년부터 1998년까지 9년 연속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1990년대 북한의 경제 위기는 흔히 식량난, 에너지난, 원자재난, 외화난의 4대난으로 표현되는데(양문수, 2010: 17), 근본적인 위기는 에너지난에서 초래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은 당시 중화학공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았고, 원유 수입량의 대부분을 구소련으로부터 공급받았다. 그런데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 중동부유럽과 구소련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하면서 북한은 더 이상 구소련으로부터 구상무역(barter trade) 형태로 원유를 구매할 수 없게 되었다. 당연히 원유 구매가격은 상승했고 북한은 필요한 만큼 원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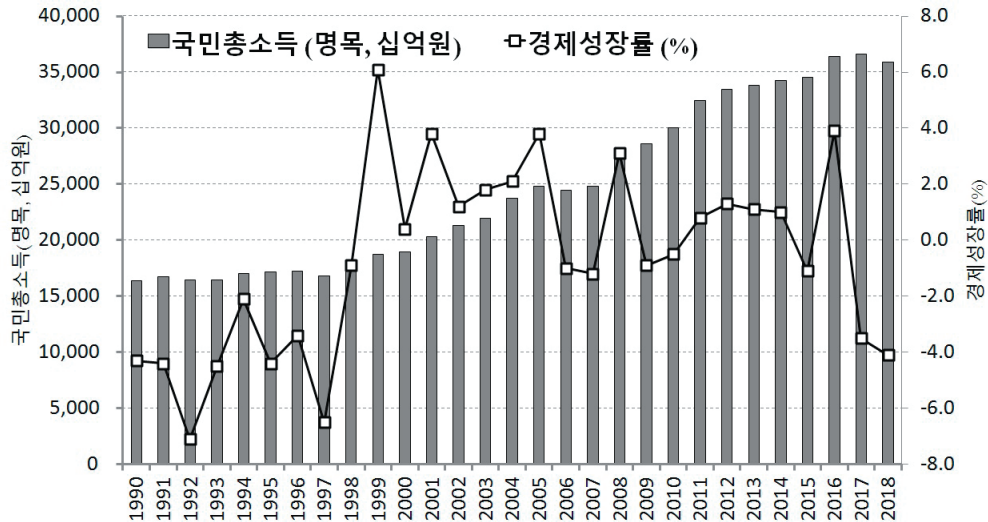


그림 1. 북한의 국민총소득과 경제성장률 변화(1990~2018년)

자료: 통계청 북한통계(<http://kosis.kr/bukhan/index.jsp>)

를 구매할 수 없었다. 원유로 움직이던 발전소와 공장들은 작동을 멈췄다. 특히, 천연자원을 캐내던 광산도 작업을 할 수 없게 되자, 천연자원을 원료로 움직이던 다른 산업들도 작동을 멈췄다(Kim, B.-Y., 2017: 47). 1990년대 북한의 산업 가동률은 20~30% 수준으로 떨어졌고, 중앙 집중적 물자 공급체계는 일부 전략적 부문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기능을 멈췄다(이석기, 2009: 102).<sup>11)</sup>

북한 당국은 이와 같은 극심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중요한 경제 정책을 시행하였다(Kim, B.-Y., 2017: 49-51). 첫째, 그동안 소규모 농민시장(small-scale collective farm market)을 제외하고는 강력하게 통제해왔던 시장 거래를 암묵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했다. 국가가 식량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민들은 생존을 위해서 시장 거래 활동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 기존 농민시장이 거대한 암시장으로 변모하게 된 것이다(양문수, 2013: 48). 둘째, 북한 당국은 대외 창구를 부분적으로 개방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나진-선봉 경제특구가 먼저 개발

되기 시작했고, 어느 정도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금강산 관광특구, 개성공단, 신의주 특별행정구가 조성되기 시작했다(다음은 참조할 것. 이승욱, 2016). 셋째, 북한 당국은 기업과 지역 수준으로 계획 과정을 분권화하였다. 이와 함께 지방 정부(regional government)의 독자적인 위상이 높아졌다.<sup>12)</sup> 넷째, 북한 당국은 2002년 7월 1일, 7·1 경제관리개선조치(the July 1st Economic Management Improvement Measures)를 발표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시장 경제 메커니즘을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관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7·1 경제관리개선조치가 마련되기 전인 2001년부터 국가 경제 개선을 위한 비상대책회의가 계속해서 열렸다고 한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전문가들은 북한이 완전한 개혁·개방을 해야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한다. 계획의 일원화·세부화와 함께 김일성이 제시했던 ‘대안의 사업 체계’는 부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산리 방법’도 부정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철저한 김일성주의 노선을 따르던 김정일의 반대로 최종적으로 발표된

7·1 경제관리개선조치는 중도적이고 온건적인 개혁 내용을 담게 되었다고 한다(G씨와의 심층면담, 2018년 7월 27일).<sup>13)</sup> 비록 7·1 경제관리개선조치가 국가 사회주의 계획 경제체제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포스트 사회주의 체제전환(post-socialist system transformations)과 달리 사회주의 말기(late socialism)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상 유지적·체제 보장적 성격의 개혁에 가깝지만(박제훈, 2009: 28, 30-31), 북한의 시장화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획기적인 성격의 개혁임에는 틀림없다.

7·1 경제관리개선조치는 가격과 임금, 환율을 인상하는 가격체제 개혁과, 농업에 있어서 곡물 수매가를 인상하여 농민의 생산의욕을 높이고 농장의 경영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포함한다(양문수, 2013: 50). 특히,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기업은 자체적으로 생산 지표를 개발해 승인을 받으면 공식적인 계획 지표로 삼을 수 있었고, 액상 지표(총생산액)만 달성하면 현물지표(품목별 생산량)를 달성하지 않아도 되는 자율권을 갖게 되었다. 또한 기업소에서 제작한 공산품을 시장에 판매할 수 있었고 기업 간 거래를 통해 원자재 조달이 가능해졌다(이석기, 2009: 124-133). 무엇보다도 공장 당위원회보다 능력을 갖춘 실무형 지배인의 권한이 강화되었다.<sup>14)</sup> 그리고 노동력에 대한 재배치나 효율화, 인센티브 권한을 기업 내부자인 지배인이 갖게 됨으로써 기업의 경영 자율성이 높아졌다(이석기, 2009: 133-142).

표 2는 북한 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2000년 이후 귀하가 근무했던 기업소에서의 자율권이 증가했다면 어떤 점에서 자율권이 증가했다고 생각하는지, 우선순위에 따라 두 가지만 선택'해 달라고 질문한 결과를 보여준다. 첫 번째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율적 목표치가 증가'했다는 답변(22건, 44.9%)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서 '기업의 필요 노동 채용의 자유'가 높아졌다는 답변(12건, 24.5%)이 높게 나타났다. 이 두 개 항목의 응답비율만 전체 응답자의 약 70%에 해당한다. 두 번째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생산한 제품에 대한 처분이 자유로워졌다'는 답변(14건, 31.1%)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원자재 구입의 자율성'이 높아졌다는 답변(12건, 26.7%)이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설문 결과를 통해서 2000년 이후 지표 개발의 자율성과 지배인 권한 강화에 따른 노동력 채용의 자율성이 뚜렷하게 높아졌으며, 기업 간 거래가 활성화되어 원자재를 구입하고 생산품을 처분하는 일이 이전보다 훨씬 자유로워졌음을 알 수 있다.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여러 가지 후속 조치들이 뒤따랐다. 2003년에는 기존 '농민시장'의 명칭을 '시장'으로 바꾸고 거래 품목의 범위를 농토산물을 포함해 식량 및 생필품 전반으로 확대하도록 한 종합시장제도가 시행되었다(김병연·양문수, 2012: 109; 양문수, 2013: 51). 그리고 일부 국영상업을 (위탁)수매상점으로 전환하고, 무역회사나 기업소, 기관 등이 국영상점을 인수해서 수입물

표 2. 기업의 자율권 증가 항목

우선 순위	기업의 자율적 목표치 증가		기업의 필요 노동 채용의 자유		생산한 제품에 대한 처분 자유		원자재 구입의 자율성		가격과 임금 결정 자유		기업 간 거래에서 현금사용		합계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1	22	44.9	12	24.5	9	18.4	5	10.2	1	2.0	0	0.0	49	100.0
2	2	4.4	6	13.3	14	31.1	12	26.7	4	8.9	7	15.6	45	100.0

자료: 북한 이탈주민 대상 설문조사, 2018

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김병연·양문수, 2012: 109).

그러나 북한 당국의 예상과 달리, 시장 경제활동이 지나치게 활발해지면서 체제 유지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자, 북한 당국은 2005년 하반기에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의 시행을 중단하면서 시장화를 억제하기 시작했다. 시장에 대한 단속과 통제는 2007년부터 본격화되었는데(양문수, 2013: 52), 종합시장에서 물품을 파는 상인의 연령과 거래 품목, 활동 시간 등을 제한하기 시작했다(김병연·양문수, 2012: 112). 2009년에 발표된 종합시장의 폐쇄와 화폐개혁은 시장화를 강력하게 억제하는 반동적인 성격의 정책이었다. 특히, 2009년 11월말에 단행된 화폐개혁(the currency reform of November 2009)은 화폐단위인 ‘원’은 그대로 둔 채, 구권 100원을 신권 1원으로 변경하고,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구권의 일정량만을 신권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한 조치였다. 따라서 개인들이 보유한 잉여자본은 국가에 흡수되거나 사장(死藏)·퇴장(退藏)되는 결과를 가져왔다(양문수, 2010: 105-109; 양문수, 2013: 52-53; Kim, B.-Y., 2017: 65-66).

그러나 2009년 화폐개혁도 북한의 시장화라는 큰 흐름을 막지 못했고, 오히려 정책 부작용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만 초래했다. 대표적으로 물가와 환율이 폭등했다. 이미 시장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에서 북한 당국이 시장을 통한 물자교류를 제한하니,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했고, 화폐개혁 과정에서 북한 화폐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커졌기 때문이다(김병연·양문수, 2012: 119-121; 양문수, 2013: 53).<sup>15)</sup> 이에 북한 당국은 이듬해인 2010년 2월부터 시장에 대한 단속을 완화하고, 5월에 바로 ‘5·26지시’를 통해서 시장 억제 정책을 전면 철회하였다.

김정은 정권이 출범한 2012년부터 북한 당국의 시장화 정책은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2012년 6·28 신경제관리지침이 발표되면서 기업

소를 비롯한 여러 경제주체들의 자율성이 크게 높아졌고, 시장이 더욱 활성화되었다(임을출, 2016). 양문수(2016: 29-30)는 2012년 이후 등장한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이 기존 사회주의 경제지도와 국가의 통일적 지도를 일정수준 완화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다음으로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의 시장화 정도와 시기별 변화를 북한 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분석의 편의를 위해서 2002년 이후 시장화 관련 정책 발표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네 개의 시기로 구분하였다. (1) 시장화 촉진기(2002~2004년), (2) 시장화 조정기(2005~2008년), (3) 시장화 억제기(2009~2010년), (4) 시장화 회복 및 발전기(2011년 이후)<sup>16)</sup> 그런데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할 때는 시장화와 관련한 정책이 발표된 이듬해를 기준으로 시기를 구분하였다. 왜냐하면 북한 이탈주민의 탈북시점과 우리나라로의 입국시점 간의 차이가 존재하고, 모든 시장화 관련 정책이 매해 첫날에 발표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문조사 분석에서는 다음과 같이 탈북연도를 기준으로 시기를 구분하였다. (1) 시장화 촉진기(2003~2005년), (2) 시장화 조정기(2006~2009년), (3) 시장화 억제기(2010~2011년), (4) 시장화 회복 및 발전기(2012년 이후)

표 3은 전체 소득에서 시장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의 변화를 탈북연도에 따라서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설문 대상자 수가 적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분석을 하기는 어렵지만,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시장 부문 소득 비율이 북한의 시장화 촉진기-조정기-억제기-회복 및 발전기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장화 촉진기(탈북연도 2003~2005년 기준)에는 모든 응답자가 전체 소득의 70% 이상~100%을 시장 부문 활동을 통해서 얻었다고 응답했지만, 시장화 조정기(탈북연도 2006~2009년 기준)와 억제기(탈북연도

표 3. 전체 소득에서 시장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의 변화

탈북연도	시장 부문 소득 비율(%)						합계	
	0이상~30미만		30이상~70미만		70이상~100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2003~2005년	0	0.0	0	0.0	7	100.0	7	100.0
2006~2009년	2	16.7	3	25.0	7	58.3	12	100.0
2010~2011년	7	25.9	2	7.4	18	66.7	27	100.0
2012~2018년	3	12.5	2	8.3	19	79.2	24	100.0

주: 2006년 북한 이탈주민은 없음.  
 자료: 북한 이탈주민 대상 설문조사, 2018

표 4. 시장을 통한 식량 확보 비율의 변화

탈북연도	시장을 통한 식량 확보 비율(%)						합계	
	0이상~30미만		30이상~70미만		70이상~100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2003~2005년	1	14.3	2	28.6	4	57.1	7	100.0
2006~2009년	4	33.3	3	25.0	5	41.7	12	100.0
2010~2011년	9	33.3	6	22.2	12	44.4	27	100.0
2012~2018년	7	29.2	1	4.2	16	66.7	24	100.0

주: 2006년 북한 이탈주민은 없음.  
 자료: 북한 이탈주민 대상 설문조사, 2018

2010~2011년 기준)에는 해당 응답 비율이 감소한다. 특히, 시장 억제기에는 낮은 시장 부문 소득 비율(0%이상~30%미만)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아진다. 그러나 시장화 회복 및 발전기(탈북연도 2012~2018년 기준)가 되면 높은 시장 부문 소득 비율(70%이상~100%)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아진다.

표 4는 시장을 통한 식량 확보 비율의 변화를 탈북연도에 따라서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표3에서와 같이 시장을 통한 식량 확보 비율이 북한의 시장화 촉진기-조정기-억제기-회복 및 발전기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식량은 시장 외에도 배급(급양)이나 국영시장 등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고, 북한 내 근무직종에 따라서 식량 확보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표 3과 비교할 때, 시장화가 진전된다고 해서 반드시 높은 시장 확

보 비율(70%이상~100%)에 대한 응답 비율이 뚜렷하게 높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 2) 북한 내 여러 경제주체들의 다양한 공간 관행

이 절에서는 북한의 여러 경제주체들의 다양한 길들이기 관행을 심층면담 사례를 통해서 분석한다. 특히, 여기에서는 북한 내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경제위기에 어떻게 대응해왔고 이를 통해 나타나는 다양한 경제관행들이 공간성과 어떻게 얽혀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규명하였다. 여기에서는 북한 내 다양한 경제주체들을 크게 (1) 국가 공무원, (2) 무역 일꾼, (3) 기업소 근무, (4) 학교 교사, (5) 가내 수공업, (6) 장마당 활동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sup>17)</sup>

### (1) 국가 공무원

황해남도 도인민위원회에서 근무했던 K씨는 국가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다른 경제주체들과 달리 드러내놓고 시장 경제활동에 참여하기가 어려웠다고 한다. 그렇지만 자신의 지위를 활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지대추구적 관료(rent-seeking state officials)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K씨는 함경남도 단천에서 나오는 아연정광을 비공식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해당 업자를 도와주고 지대를 수취한 경험이 있다. 원래 아연정광(버력을 가려내어 품질이 높은 아연광석 또는 아연광석의 가루)과 같은 광물은 국가계획위원회와 채취공업성(과거 광물성)에서 승인한 무역회사를 통해서만 해외에 수출할 수 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부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생산량을 조작하고, 이렇게 따로 챙긴 광물자원을 비공식적 경로를 통해 판매하기도 한다(K씨와의 심층면담, 2018년 7월 28일). K씨는 이렇게 아연정광 7톤을 문제없이 통관시켜주는 대가로 300~400US\$를 북한 업자로부터 받았다고 한다. 이처럼 거래관계를 통해 형성된 인맥은 필요할 때 서로 도와주는 관계로까지 발전하게 된다고 한다.

“서로가 인맥으로 하다 보니까 얼마 안 되죠. 300불이나 400불 정도? 나머지는 그냥 내가 필요로 할 때 손을 내밀면, (도와주는) 그런 관계로 발전하는 거죠(K씨와의 심층면담, 2018년 7월 28일).”

김병연·양문수(2012: 92-100)는 북한에서 시장화가 진행되면서 국가 관리자들이 사적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러한 사적 이익, 곧 지대추구는 그러한 권력을 지닌 자들에 의해서 수행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권력을 갖는 자는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더 많은 부를 축적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른바 정경유착형 부익부

빈익빈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김병연·양문수(2012: 102-103)는 북한에서 이와 같은 부패구조가 다음의 두 가지, (1) 불법과 합법이 얽혀 있고 권력 관계에 의해 자의적 통제가 가능한 낮은 제도화 수준과 (2) 국가 재정 감소로 인해 기관이 자체적으로 수익을 창출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분석한다. 아연정광의 밀수출 역시 허술한 제도를 활용하여 이루진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에서 규정상 이런 광물 취급은, 세관을 통과할 수 있는 워크를 가진 일부 무역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회사의 워크를 빌리거나 아니면 세관하고 짜서 (광물을) 다른 품목으로 둔갑시켜서 수출합니다. 이렇게 허술합니다. 허술해요(K씨와의 심층면담, 2018년 7월 28일).”

임을출(2016: 185-186)은 돈주들의 성장을 정치력과 경제력의 교환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돈주들은 자신에게 부족한 정치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권력층과 비공식적 관계를 형성하며, 권력층은 돈주들에게 정치력을 제공하는 대가로 경제력을 확보한다고 말한다. 이처럼 어떤 사람이 돈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능력뿐만 아니라 자신의 활동이 방해받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줄 수 있는 권력자와의 비공식적 관계 형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 기관에서 근무했던 G씨는 북한에서 돈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권력과의 유착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실제로 G씨의 친척 중 한 명은 1990년대 어려운 시기에 자신이 빌려준 천 달러 정도의 자금으로 담배를 팔기 시작했지만, 국가 기관에 다니는 자신의 영향력과 보호 아래 지금은 평양에서 제일가는 담배거래상으로 성장했다고 한다(G씨와의 심층면담, 2018년 7월 27일).

(2) 무역일꾼

국가 무역기관에서 무역일꾼으로 일한 C씨는 국가로부터 할당된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윤 창출이 될 수 있는 원천을 탐색하고 해외대방과 접촉하여 무역 관련 계약을 성사시키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C씨와의 심층면담, 2018년 6월 16일). C씨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의류 임가공 교역이나 북한 노동력의 해외 파견과 같이 인력을 활용하는 사업을 성사시키는 일을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서 북한대방은 보통 국가 무역회사에서 일하는 무역일꾼이 맡는다. 이처럼 인력을 활용하는 사업을 성사시키는 일을 북한에서 중요하게 평가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일정 수준 이상의 이윤을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서 C씨는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회사에서도 장려를 해주고, (성사가 되면) 잘했다고 평가해주고, 그거 끌어들여서 성사를 시키면 시간을 좀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설비든, 원자재 들여오든, 뭣이든 들여오는 거 아녜요? 그다음에 인력이 밖에 나가서 뭘 한다고 해도 돈이 들어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주 이상적이죠. ... 무역일꾼으로서 그 하나만 성사되면 매해 계획을 뭘 2만\$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독촉을 안 받습니다. ... 사람들에게는 작은 일에 관심을 크게 안들려도 그 하나만 피복 공장 같은 데에 원자재만 정상적으로 들어오게 해주고 생산된 물품의 출하를 책임지고 해주고, 출하되는 데 따라서 돈만 결제받아 가져오고, 이 얼마나 좋아요. 아주 그저. 출퇴근 깨끗하게 하면서, 투기적으로 무슨 상품 수입하고 수출하는 것보다는 아주 좋은 항목으로 사람들에게 상당히 인기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죠(C씨와의 심층면담, 2018년 6월 16일).”

그러나 이와 같은 사업은 성사시키기가 어렵다.

신뢰를 기반으로 이미 구축된 거래 관계를 뚫고 새로운 거래 관계를 구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 점은 북중 간 거래에 있어서 신뢰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북한의 시장화가 촉진되면서 해외대방을 만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일반 기업에게 주어지는 등 기업의 자율권이 높아진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과정에서 계획이 완전히 후퇴한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북한에서 기업들이 해외대방을 탐색하고 일감을 확보하는 일은 장려되고 있지만 계약을 체결하고 외화를 벌어들이는 과정에서 북한 내 관련 기관들의 승인과 보고를 모두 거쳐야 한다. 이는 계획 부문과 시장 부문이 절합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3) 기업소 근무

J씨는 나진가구조립회사 부기로 일했으며, 2000년 이후 J씨는 회사 내에서 여러 가지 이윤 창출을 위한 부업 활동에 참여했다. J씨에 따르면 회사에서 가구를 제작하고 남은 원부자재를 활용하여 베개나 접이식 매트리스를 만들어서 별도로 판매하기도 했다고 한다. 베개는 나무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나온 대팻밥을 넣어서 만들었고, 매트리스는 평양 외화상점에 들어온 한국산 접이식 매트리스를 본떠서 제작했는데 모두 가구회사에서 얻을 수 있는 천이나 나무, 스펀지 등을 재료로 활용하였다. 이렇게 제작된 제품들은 공식적으로 등록하지 않고 별도로 팔아 수입을 얻었는데, 이와 같은 수입은 어려운 회사의 살림에 큰 보탬이 되었다고 한다(J씨와의 심층면담, 2018년 7월 26일).

“그때 당시에는 ... 말하자면 회사마다 여기(한국)처럼 전산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건 그냥 팔아서 회사 경영에서 쓰는데, 출고 입고를 따로 잡지 않고, 사장에게 입금이 되서, 그저 바쁜 목을 열어준 거죠. 조금 부족한 측면을 메꿔줬죠.

그리고 회사가 뭘 건설할 때, 거기에 건설 자재가 많이 들어갔고, 어쨌든, 그때 우리 사장이 그게 큰 몫을 했다고 그냥 늘 외웠거든요. 특별하게 장부에 그걸 팔아서 입고를 잡고 이리지는 않았어요. 뭔가 공간이, 구멍이 좀 많죠(J씨의 심층면담, 2018년 7월 26일).”

이와 같은 활동은 기업에서 나오는 부산물과 폐기물 등을 활용하여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8·3 인민소비품<sup>18)</sup> 생산과 같은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 생산한 물품을 비공식적으로 판매했다는 점에서 공식과 비공식 간의 경계가 모호한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기존 8·3 인민소비품 생산은 기업의 공식적인 수입(변 수입 지표)으로 보고되는 것이 일반적이다(양문수, 2010: 320). 그렇지만 이석기(2009: 127-128)에 따르면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이 정규자재를 활용한 것인지, 그렇지 않았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모호해졌기 때문에 8·3 인민소비품이란 개념이 크게 약화되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아직까지 국가 사회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기업이 생산한 물품을 공식적으로 시장에 판매할 수 없다. 따라서 나진가구조립회사는 8·3 인민소비품을 장부에 잡지 않고 판매한 것으로 이해된다.

J씨에 따르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다양한 부수입의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어렵지 않게 생활할 수 있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옷을 만들 수 있는 천을 무료로 회사에서 얻을 수 있었고, 식량 등을 중국에서 수입해올 때는 식량 일부를 직원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고 한다. 그리고 아무래도 가구조립회사다보니 자투리 나무들이 회사 내에 많았는데 일부 직원들을 이것을 가져다가 뭔가를 만들어서 개인적으로 판매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처럼 회사의 설비나 원부자재 등을 개인적인 이윤 창출을 위해 활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 (4) 학교 교사

해산시 상업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했던 A씨에 따르면 1990년대부터 북한의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학교에서 공식적인 임금과 배급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생계가 어려웠다고 한다. 학교에도 기업소의 8·3 노동자와 유사한 형태의 제도가 운용되고 있었다고 한다(A씨와의 심층면담, 2018년 7월 27일). A씨는 학교에 교사로 속해 있으면서 일정 시간 장마당에서 시장 경제활동에 참여했다. 여성의 경우, 공식적으로 직장에 소속되어 있으면 여맹조직에서 활동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다. 여맹조직에서 활동하게 되면 매일 생활총화와 각종 노동 활동에 참여해야 하므로 장마당 활동에 참여할 수가 없었다. 차라리 소속되어 있는 직장에 이익의 일정 부분을 납부하고 시장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본인에게 큰 이익이었다.

“... 왜, 소속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했다면, 그때는 제가 50세 정도여서, ... 북한에서는 노는 사람들을 모아서 여맹 조직이란 걸 꾸며놓았어요. 그 여맹 조직이 엄청 복잡해요. 제가 직장에 다니면 거기 인민반에서 단속을 안 하지만 ... 거기에 가게 되면 매일 아침에 어딜 가야 하고, 엄청 복잡해요. 직장 안 다니면 계속 거길 다녀야 해요. 그래서 저는 직장 다닌다고 하면서 빠진 거죠. 그래서 직장에 다니면서 장사를 해도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못 하죠. ... 총화! 그다음에 김매기 등, 뭐 이루 다 말할 수 없어요. 장마당에 가서 장사를 못 하게 만들어요(A씨와의 심층면담, 2018년 7월 27일).”

L씨는 수학교사로 근무할 때 당 간부 자식들을 상대로 개별 교습 활동을 하며 돈을 벌었다고 한다. 개인 교습은 엄연히 불법이지만 당 간부 자식을 가



르치는 일이기 때문에 단속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비록 교사 월급이 적었지만, 학부모들이 뇌물을 주기 때문에 어렵지만, 근근이 살아갈 수 있었다. 나중에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먹고살기 위해서 무역업에 진출하게 되었는데, 무역업으로 번 수입이 개인 교습으로 번 수입의 9배쯤 많았다고 한다.

“학부모들이 뇌물을 주죠. ... 교사 월급은 쌀 한 킬로그램에 안 되니까요. 그런데 학부모는 ... 우리 선생님이 먹을 걱정이 없어야 우리 애들 잘 가르쳐주지 않을 거 아니냐며 학부모회장들이 다 코치하면서 우리 얼마씩 모으자고 해서 매달 가져다줍니다. ... 쌀로도 주고, 나무를 실어다 주기도 하고, 그래서 먹고는 살았습니다(L씨와의 심층면담, 2018년 5월 19일).”

### (5) 가내 수공업

어려서부터 피복 관련 일을 배워서 오랫동안 가내 수공업 형태로 피복을 제작해 온 H씨 사례를 통해 북한에서 한 개인의 가치관이 시기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해볼 수 있다(H씨와의 심층면담, 2018년 5월 19일). 관행의 준거가 되는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H씨는 피복을 만들던 일을 그만두고 장마당에서 광물자원 밀수 중개인으로 활동하거나 소규모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일에 참여하게 된다. 관행의 준거가 되는 가치관은 다중적인 가치 순환 및 네트워크를 통해서 산출된다(Lee, 2006: 415).

H씨는 20대부터 수출피복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다(1985~1986년). 당시 수출피복공장에서는 꽃무늬 천으로 여성용 원피스를 만들어 구소련 지역으로 수출했는데, 근무시간도 길었고 자유시간이 제한적이어서 2년 만에 해산시 편의관리소에서 운영하는 ○○ 양복 기업소로 이직하였다. ○○ 양복 기업소는 근로자 45명 정도의 무급 기업소로 여기에서 H씨는 국가계획에 의한 물품을 만들기도 개인들이 주문하는 의류를 만드는 일을 했다. ○○ 양

복 기업소에서 약 10년간 일하면서 고난의 행군기 때 잠시 식당에서 일하기도 했지만, 봉제기술만 있으면 먹고살 수 있다는 신념으로 극복했다.

H씨가 본격적으로 가내 수공업 형태로 피복을 만들기 시작한 것은 1998년부터였다. 집에서 약 8년간 양복, 바지, 솜옷, 운동복 등을 만들었다. 주문자가 옷감을 구해주면 수공비만 받고 옷을 만들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혼자 양복을 만드는 일을 했는데 양복 한 벌을 제작하는데 2~3일이 소요되는데다가 한 벌에 대한 수공비라고 해봤자 쌀 10kg에 해당하는 북한 돈 1,000원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수익을 창출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천대방들에게 천을 구해서 동업자와 함께 흐름식(분업)으로 바지를 만들기도 했다. H씨에게 피복일은 부모님의 직업이기도 했고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노력해서 익힌 기술이었기 때문에 애정과 자부심을 가져다주었다. 그래서 한동안 피복 일을 손에서 놓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맞춤식 옷에 대한 수요도 감소하고 피복 수공비도 크게 오르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천을 파는 일보다 수익이 떨어졌기 때문에 해당 일을 계속해서 하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2005~2006년경부터 H씨는 업종을 바꿔서 광물자원을 중국에 밀수출하는 일에 종사하게 된다. H씨는 지인과 동업하여 특히 북한산 구리(銅) 광물을 중국에 밀수출하는 일을 탈북하기 전까지 했다고 한다. H씨는 북한의 광산과 북한 대방을 연결해주는 일종의 밀수 중개인으로 활동했는데 장마당에서 쪽지를 들고서 거래 대방을 찾는 일이 어려웠지만 한 번 거래가 성사되면 수익은 컸다고 한다.

2012년부터 집에서 만든 음식을 장마당에서 팔다가 환전상인(돈 데꼬) 아파트 밑에서 순대를 만들어 팔기도 했지만 처음 몇 년을 제외하고는 잘 팔리지도 않고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생각에 탈북하게 되었다. 사회적 재생산 측면에서 볼 때, ‘특정 장소와 시대에서 생산된 가치의 총량 및 질’이 ‘특정 장소와 시대에서 지속적 가치 순환을 필요한 가

치의 총량 및 질'보다 적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탈북을 결심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Sheppard and Barnes, 1990; Lee, 2006).

### (6) 장마당 활동

A씨는 2004년 학교 교사직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양강도 혜산시 혜산시장에서 매대를 운영하면서 시장경제활동에 참여했다(A씨와의 심층면담, 2018년 7월 27일). 취급 품목은 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맛내기(화학조미료), 그릇, 전기밥솥 등이었다. 매대라고 해봤자 널빤지를 길게 만들어 앞뒤로 의자를 배치하고 공간을 일정하게 구분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A씨가 운영한 혜산시장의 매대는 다른 시장의 매대와 달리 폭이 상당히 좁았다. 함경북도 회령시 회령시장을 사례로 연구한 곽인옥(2017: 167)에 따르면 매대의 폭은 보통 70~80cm로 북한의 다른 시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가 운영한 혜산시장의 매대 폭은 공식적으로 40cm였지만 실제로는 그마저도 2cm씩 줄인 38cm였다. 폭이 좁을수록 시장을 운영하는 기관으로서의 그만큼 많은 상인들에게 매대 구입비와 장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A씨가 처음 매대를 구입한 2004년 경에는 매대 구입비가 북한 돈으로 16만원이었는데, A씨가 탈북하던 2011년경에는 매대 구입비가 북한 돈 60~70만원으로 크게 올랐다고 한다. 매대 구입비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것과 달리 매일 시장 관리위원회에 납부하는 장세는 하루 북한 돈 500원으로 오르지 않았다고 한다. 장세는 취급 품목에 따라 정해져 있는데, 공업품의 경우 하루 1,000원, 담배 등을 파는 매대는 하루 500원, 일반 식료품 매대는 하루 100~200원이었다고 한다.

매대에서 취급하는 물품들은 주로 중국에서 밀수 형태로 입수한 것을 구입한 것이라고 한다. 북한에서는 접경지역에서 보따리무역이나 밀무역에 종사하는 개인업자를 사사(私事) 여행자라고 하는데, A씨는 이들로부터 판매할 물품을 구입하여 장마당에

내놓고 팔았다고 한다(곽인옥, 2017: 130-131을 참조할 것). 이와 같이 주민들은 시장경제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초보적인 자본 축적의 원리를 학습하기도 한다.

한편 A씨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입수한 정보를 바탕으로 화폐개혁이 곧 진행될 것을 미리 인지하고, 보유한 북한 돈을 될 수 있는 한 많이 현물화함으로써 화폐개혁에 따른 피해를 크게 겪지 않을 수 있었다고 한다. 천 장사를 하던 딸이 평양에 거주하던 친구로부터 화폐개혁이 있을 거란 이야기를 전해 듣고 화폐개혁 발표 당일 아침에 A씨를 찾아와서 가진 돈을 모두 현물로 구매할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A씨와의 심층면담, 2018년 7월 27일).

“2009년도 11월 30일 날, 아침에 정신없이 뛰어 왔더라고요. 엄마, 엄마 지금 돈이 어디 있냐? 갑자기 내 재산을 물어보냐?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빨리 가서 사탕가루면 사탕가루, 사카린이면 사카린을 사놓으라는 거예요. 맛내기도, 맛내기도 한 봉지에 2,000원, 3,000원씩 했거든요. 그래서 야, 왜 그러냐? 우리 아저씨가. 아버지(아버지) 암말도 하지 말고 지금 화폐 개혁을 한대요. ... 그런데 이제 딸내미가 어떻게 알았는지 빨리 엄마 가서 사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릇이나 그런 건 못 사오고. 그래서 설탕가루 50킬로짜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온 미원 맛내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있는 돈을 싹 써서 샀죠(A씨와의 심층면담, 2018년 7월 27일).”

Round와 Williams(2010: 188)는 포스트 사회주의 체제전환의 맥락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나타났던 수많은 대처 전술(coping tactics)의 배후에는 이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네트워크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Smith와 Stenning(2006: 207)도 포스트 사회주의에서의 대안적 관행들을 연구하면서 “강한 사회적 네트워크와 출신 성분이 좋

은 가족을 배경으로 사회적, 인문적, 재정적, 지식/기술 자원의 관점에서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집단이 권리를 박탈당하고, 주변화된 노동자나 소농보다 더욱 다양한 경제활동에 관여하기가 용이하다”고 주장한다. 마찬가지로 2009년 화폐개혁을 극복한 A씨의 사례 역시 사회적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교사로 일하다 2004년부터 장마당 활동에 참여했던 L씨는 학창시절 평성과학원 친구들과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장사를 하였다. 이 사례는 여전히 사회적 관계의 착근성(embeddedness)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L씨가 평성에서 혜산으로 거주지를 멀리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사회적 관계를 활용하여 적절하게 대처 전술을 구사하였다는 점에서 영역적 착근성(territorial embeddedness)뿐만 아니라 네트워크적 착근성(network embeddedness)도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평성과의 긴밀한 사회적 네트워크로 인해 L씨는 중국에서 들여온 물품을 주로 평성에 공급했다고 하는데, 대략 10개 중 7개가 평성으로 팔렸다고 한다(L씨와의 심층면담, 2018년 5월 19일).

## 5. 결론

본 논문은 ‘실제로 존재하는 북한의 시장화(actually existing the marketization in North Korea)’를 파악하기 위해서 북한의 시장화가 특정 공·시간적 맥락에서 구체적인 공간 관행(spatial practices)을 통해 (재)구성되는 것으로 설명했다(이와 관련하여 다음을 볼 것. Painter and Goodwin, 1995: 347-351; Pickles, 2010: 136). 이를 위해서 본 논문은 ‘관행(practices)’, ‘길들이기(domesticating)’, ‘절합(articulations)’을 제시하고, 이

들 개념들이 북한 시장화 연구에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본 논문은 경제주체들의 관행에 대한 지리적 상상력을 넓힘으로써 다양한 관행들이 발생하는 ‘다중적이고 중첩된 지리들(multiple and nested geographies)’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북한의 시장화는 헤게모니 권력(hegemonic power)을 갖는 거대 프로젝트(grand project)로서 ‘저편에 놓여 있는’ 무엇이 아니라, 특정 공·시간적 맥락에서 경제주체들의 구체적인 공간 관행을 통해 항상 이미 ‘감당할만한 수준’으로 (재)구성되었음을 보여주었다. 끝으로 북한 시장화를 통해 나타나는 공간의 모습을 다양한 경제가 절합된 불균등하고 역동적인 성격(uneven and dynamic spatialities)으로 제시하였다(Smith and Stenning, 2006: 208; Stenning *et al.*, 2010: 79).

북한의 시장화를 길들이기 관점에서 파악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 첫째, 북한 시장화 과정에서 초래된 여러 가지 경제적 위기와 과열, 경제적 주변화에 대해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내부와 외부 간의 병치(juxtaposition of inside and outside), 양자 간의 지속적인 교섭을 통해서 어떻게 (재)구성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둘째, 그와 같은 지속적인 교섭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의 자산과 가치, 지식, 위치성(positionality)이 절합되면서 관행이 갖는 효과성이 차별화된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북한 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에서는 특히 권력 관계(power relations)와 사회적 네트워크에 따라서 관행의 효과성이 차별화되는 사례들을 살펴볼 수 있었다. 셋째, 관행을 사회적 재생산의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 사회적 재생산에 초점을 둔다는 것은 단순히 매일매일 무엇인가가 진행되는 차원이 아니라 가계와 가계 구성원들이 또 다른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주목한다. 그와 같은 필요는 물질적인 것에 한정된 것이 아니며 비물질적인 것이기도 하다(Stenning *et al.*,

2010: 78-79). 결국 북한 시장화를 길들이기 관점에서 파악함으로써 우리는 북한 시장화 과정에서 경제주체들은 단순히 먹고사는 문제 외에 다른 가치관의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넷째, 북한 시장화를 경제와 비경제, 공식 부문과 비공식 부문, 계획 경제와 시장 경제가 서로 절합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기존 주류 북한 연구자들도 계획 부문과 시장 부문 간의 상호 구성적 발전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절합의 관점에서 북한 경제를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예를 들어, 다음을 볼 것. 양문수, 2013: 54-55). 그러나 본 논문이 주장하는 다양한 경제들 간의 '절합'은 이러한 인식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할 것을 촉구한다. 북한 경제의 모습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채롭다. 따라서 북한 경제의 모습을, 그리고 시장화의 모습을 일상의 삶과 분리한 채 이해할 수가 없다(이와 관련하여 다음을 볼 것. Lee, 2006). 이점은 본 논문이 경제주체들의 일상생활 관행에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 주

- 1) 본 연구는 2년간의 북중 접경지역 연구 중 두 번째 해 연구를 정리한 것이다. 첫 번째 해에는 중국 동북 3성, 특히 라오닝성(辽宁省) 단둥(丹东)에서 북중 접경지역을 바라보았다면, 두 번째 해에는 북한에서 북중 접경지역을 바라보고자 했다. 본 연구는 2017년 9월에 나온 한국경제지리학회 특집 논문인 '후기 사회주의 체제 전환과 북중 접경지역의 예외적 공간 형성에 관한 연구(이들 중에서 다음을 볼 것. 이승철 외, 2017)'에서 다루지 못한 나머지 반쪽을 '북한의 시장화'에 초점을 두고 연구한 것이다.
- 2) 최근에 출간된 주류 북한 연구자들의 일상생활 연구를 담은 책 두 권의 부제(副題)는 각각 '외침과 속삭임'과 '지배와 저항 사이에서'이다. 해당 연구는 북한에 대한 왜곡되고 획일화된 관점에서 벗어나 북한을 비판적이고 성찰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북한 주민들의 다양한 울림(sonority)과 속삭임에 주목하면서 구조와 행위, 거시와 미시, 지배와 저항이라는 이분법적 차원에서 일상생활이 갖는 함의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박순성·홍민 편, 2010; 홍민·박순성 편, 2013).
- 3) Doreen Massey는 『For Space』에서 글로벌화에 대한 쟁점이 그것이 얼마나 새로운 것이며 얼마나 멀리 진전될 것인지에 놓여 있어서는 안 되고 글로벌화를 구조화하는 관계성의 사회적 형태(the social form of the relationality)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본 연구는 Massey의 이와 같은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Massey, 2005: 85).
- 4) 하지만 기존의 북한 연구자들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북한 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명확한 답변을 얻기 어렵다(이에 관해서는 다음을 볼 것. 이영훈, 2007; 김병연, 2009: 68; 양문수, 2010: 4). 우선 연구에 활용된 북한 이탈주민이 북한 전체 집단을 대표하기 어려운 표본이다. 본 조사에 참여한 북한 이탈주민 역시 북한개발연구소의 소개로 비임의표본 추출(non-random sampling)한 집단이고 계층, 성별, 출신지역별 편향도 두드러진다. 또한, 면대면 심층조사라 할지라도 탈북 시점과 조사시점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북한에서의 경험을 왜곡해서 기억할 수도 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북한 이탈주민 본인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입국한 후 북한 이탈주민 네트워크를 통해서 학습한 내용을 자신의 경험처럼 제시할 수도 있다. 이처럼 북한 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 자료는 대표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그 결과를 해석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대표성과 신뢰성 문제를 최대한 보완하기 위해서 설문 조사 결과를 기존 연구 결과와 비교하여 검증하였다.
- 5) 통일부에서 제공하는 북한 이탈주민 입국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2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로 들어온 북한 이탈주민은 총 32,476명이다. 그중에서 남성은 9,161명, 여성은 23,315명으로 여성이 전체 입국자의 약 72%를 차지한다. 또한, 출신지역별로 보면 함경북도가 제일 많은 19,291명(전체 북한 이탈주민의 약 60%)이고 그 다음이 양강도로 5,247명(전체 북한 이탈주민의 약 16%)을 차지한다(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책 자료, 2018년 12월 기준). 본 연구에 참여한 북한 이탈주민의 남녀 성비와 출신지역 분포도 이와 같은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 6) 본 논문에서는 북한 이탈주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출생연도와 탈북연도를 의도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 7) 관계론적 경제지리학에 관한 여러 비판들 중 하나는 이들이 정적인 네트워크나 특정 시점에서의 관계성을 지도화하는 데 초점을 두다보니 행위자와 실제 사이에 존재하는 역동성을 간과하게 되었다는 것이다(Jones, 2014: 608-

- 609).
- 8) 생존은 한계 필요치를 충족시키는 수준에서 달성되지만, 사회적 재생산은 한계 필요치를 넘어서는 잉여의 창출을 포함한다. 따라서 사회적 재생산 관점을 채택할 경우, 인간의 생존은 잉여의 창출을 통한 생존을 넘어선 변영을 의미하게 된다.
  - 9) articulation을 접합(接合), dis-articulation을 탈접합(脫接合) 또는 분절(分節)로 구분하여 번역하기도 하는데, 여기에서는 articulation을 끊어짐과 이어짐의 이중적 의미를 함께 포함한 절합(節合)으로 번역했다. 절합의 예는 다양하다. 가시광선의 스펙트럼에 해당하는 무지개의 빛깔은 원래 강밀도(intensity)의 차이에 따라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빨주노초파남보'의 일곱 가지 색으로 구분할 수 없다. 커켜이 쌓인 지층도 마찬가지이다. 학자들은 지층의 시대 구분을 위해서 나름의 기준을 적용하여 지층을 구분할 뿐이다(이진경, 2013: 179-185). 다양하고 복잡한 현실세계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연구자가 어떤 관점으로 현실을 인식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현실 세계의 여러 측면들은 구분되고 하고 하나의 전체로서 통일성을 이루고 있기도 하다.
  - 10) 굶주림의 위험성은 지역적,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서 차별화되었다. 생존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들은 나름의 방법을 강구해나가면서 어려운 시기를 버텨나갔다. “길 거리에 사람 시체가 나돌았어요. 1996년도 그때. 그때도 한 쪽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살아가고, 오직 과학자, 기술자들, 오직 정부만 믿고 정부가 하라는 일만 하던 사람들은 어찌저도 못하고 죽었죠. … (중략) … 그렇게 아사(餓死)가 막 일어났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조금씩 정신 차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국수 장사를 했어요. 국수를 말아서 좀 싸게 해서 팔았고, 죽도 해서 팔고, 콩물도 해서 팔고(A씨와의 심층면담, 2018년 7월 27일).”
  - 11) 국가의 배급 시스템(PDS; the Public Distribution System)의 역할은 이미 1980년대 후반부터 조금씩 축소되기 시작했다. 1987년에 식량 배급량(food ration)은 10% 감소했고, 1992년에 추가로 10% 더 감소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소비에트 블록의 붕괴와 자연재해, 그리고 이미 국가의 농업 생산 능력이 하락하게 되자, 앞친 데 댈친 격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죽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되었다(Kim, B.-Y., 2017: 48-49).
  - 12) 황해남도 도인민위원회 계획국에서 근무했던 K씨는 당시 도인민위원회가 지역 특색에 맞는 이윤 창출의 원천을 찾고 계획을 수립하여 하부 기관에 내려 보내는 역할을 했다고 한다. “지역마다 무역관리국의 역할이 중요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자력갱생을 하라는데, 그러면 도시군마다 자체로 살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할 거 아니에요? 김정일이 자력갱생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살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했는데, 그게 바로 외부와의 물물교환을 통해서 뭘 들여와야 살 수 있다고 판단된 거죠(K씨와의 심층면담, 2018년 7월 28일).”
  - 13) 양문수(2010: 71-73)에 따르면 7·1 조치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1990년대 경제위기와 대응과정에서 등장한 시장화 요구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등장한 것이다. “대내적으로는 1998년부터 커다란 정책적 기초로서 이른바 실리주의, 실리사회주의를 내세웠고, 2001년부터는 이른바 ‘신사고’를 내세웠다. 7·1 조치 실시 9개월 전인 2001년 10월, 김정일 위원장은 당과 내각의 경제일군에게 「강성대국 건설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 경제관리를 개선강화할 데 대하여」라는 제목의 지시문건을 내려 보냈다. … (중략) … 대외적으로는 1999년부터 대외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섰고, 2000년에는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했다. 그리고 7·1 조치 실시 후 2개월 만인 동년 9월에 고이즈미·김정일 정상회담이 성사되었고, 같은 시기에 신의주 특별행정구 설치가 발표되었다. 아울러 7·1 조치 실시 후 4개월 만인 동년 11월에 금강산 관광지구법 및 개성공업지구법을 공포, 이들 지역을 특구로 지정했다. … (중략) … 다만 이러한 대외개방이 의외의 복병을 만나 제대로 실행되지 못함으로써 7·1 조치의 앞길에 먹구름이 끼게 되었다. 북일정상회담 이후 납치 의혹 문제가 불거지면서 북일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었고, 북미관계는 2차 핵위기 발발로 악화일로로 걷게 되었다(양문수, 2010: 72-73).” G씨의 주장대로 김정일이 비상대책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완전히 수용하기 어려워서 7·1 조치가 완전한 개혁개방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것인지, 아니면 양문수의 주장처럼 우연적인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시장화 개혁의 의지가 꺾인 것인지는 추후 확인이 필요하다.
  - 14)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기업 지배구조에서 중요한 주체였던 당 비서의 권한이 약화되면서 기업 내부자 중심의 통제가 강화되기 시작했다. G씨와의 면담 내용을 살펴보자. “공장을 활성화하라. 지배인들에게 그만큼 권한을 주고 당 비서들은 자꾸만 깎짝거리지 말고 도와줘라. … (중략) … 당 비서들이 행정실무가 없으면서 왜 자꾸 쫓닥 나서는가? 너는 당 정책 학습이나 잘하고, 뒤에서 밀어줘라. 자꾸 나서지 말라. 그렇게 행정 일꾼들에게 힘을 많이 줘요. 종업원들은 그렇지 않아도 자꾸만 당 비서만 따르는데, 행정실무 일꾼들에게 권한까지 안 주면, 어떻게 하나? 우리는 중앙당이나 지도기관으로서의 밑에 내려가면 계속 강조하

는 게, ‘당 일꾼들은 전면에 나서지 말라. 너희는 말 자체로 당 일꾼이다. 뒤에서 사상 정책으로 밀어만 쥐라. 앞에 나서는 사령관은 행정지휘관이다.’ 그건 말하자면 행정지휘관의 권력을 사취하는 행정 대행을 하지 말라는 것을 계속 강조했던 말이죠(G씨와의 심층면담, 2018년 7월 27일).”

- 15) 양강도 해산시에 거주하던 A씨에 따르면 2009년 화폐개혁 때 북한 주민들의 반발과 불만이 컸다고 한다. “생각해보세요. 고난의 행군 이후에 그렇게 힘들게 돈을 모았는데, 갑자기 벼락부자 된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 돈을 ... 그렇게 무자비하게 ... 10만원씩 밖에 안 바뀌었다는 데요? 저도 700~800만원이 있었는데 10만원만 바뀌주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화폐개혁 이후 북한 돈(국돈)에 대한 신용이 떨어져 장사하던 사람들도 북한 돈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위안화로 환전했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환전상인 돈 테코의 역할이 커졌다. “근데 국돈을 받으면 돈 바꿀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인 돈 테코에게 물어봐서 얼마로 바꾸는지 알아봐요.(A씨와의 심층면담, 2018년 7월 27일).”
- 16) 박영자(2011: 50-51)는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의 시장화 단계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 바 있다. (1) 시장 확산 및 포섭기(2000~2004년), (2) 조정기(2005~2006년), (3) 하락기(2007~2010년 1월), (4) 회복기(2010년 2월~현재)
- 17) 본 논문은 표 1에 제시된 심층면담 대상자들 중 B씨(기업소 근무), D씨(보위사령부 근무), E씨(무용담), F씨(수출회복회사 근무, 장마당 활동), I씨(군부소속 무역일꾼), M씨(협동농장 근무)의 분석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 다루지 못한 사례들은 후속 연구에서 소개될 예정이다.
- 18) 8·3 인민소비품이란 가내 작업반이나 부업반 등에서 폐기물을 활용하여 만든 생필품이다. 1984년 8월 3일 김정일의 경공업 혁명 방침에서 처음 제시되어 8·3 인민소비품이라고 불리게 되었다(곽인옥, 2017: 100-101). 한편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 조치 이후, 노동자가 자신이 속한 기업소에 매달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면 공식적으로 출근하지 않고 외부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 이들을 8·3 노동자라고 불렀다. 8·3 노동자라는 명칭 역시 8·3 인민소비품 장려 운동에서 유래되었다(양문수, 2010: 251).

## 참고문헌

- 곽인옥, 2017, 북한시장을 말하다: 회령시장의 공간적 구조와 기능, 하늘로.
- 곽인옥·문형남, 2017, “경제제도 측면에서 북한의 빈곤화와 시장화에 대한 분석,” 국제지역연구 21(2), pp. 71-96.
- 김병연, 2009, 북한경제의 시장화: 비공식화 가설 평가를 중심으로, 윤영관·양운철 편, 2009,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경제와 사회: 계획에서 시장으로?, 한올아카데미, 2장.
- 김병연·양문수, 2012, 북한 경제에서의 시장과 정부,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김택현·안준범 역, 디페시 차크라바르티 저, 2014, 유럽을 지방화하기: 포스트식민 사상과 역사적 차이, 그린비. (= Chakrabarty, D., 2000, *Provincializing Europe: Postcolonial Thought and Historical Difference*, Princeton University Press.)
- 박순성·홍민 편, 2010, 북한 일상생활 연구: 외침과 속삭임, 한올아카데미.
- 박영자, 2011, “융합연구 시각에서 본 북한 시장화의 행위자와 상호작용,” KDI 북한경제리뷰 2011년 7월호, pp.47-57.
- 박제훈, 2009, “북한경제의 개혁과 체제전환: 이행경제학적 접근,” 비교경제연구 16(1), pp.1-45.
- 안영진, 2018, “독일통일 후 구 동독지역의 변화에 비추어 본 통일 대비 지리학적 연구 방향,” 2018 대한지리학회 연례학술대회 자료집, pp.33-34.
- 양문수, 2010, 북한경제의 시장화: 양태·성격·메커니즘·함의, 한올아카데미.
- 양문수, 2013, “북한의 시장화: 추세와 구조 변화,” KDI 북한경제리뷰 2013년 6월호, pp.45-70.
- 양문수, 2016, “2015년 북한 시장화 동향과 향후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2016년 1월호, pp.13-34.
- 엄은희·이현재 역, 김슨-그래엄 저, 2013, 그따위 자본주의는 벌써 끝났다: 여성주의 정치경제 비판, 알트. (= Gibson-Graham, J. K., 1996, *The End of Capitalism as We Knew It*,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윤영관·양운철 편, 2009,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

- 한경제와 사회: 계획에서 시장으로?, 한반도평화 연구원총서 2, 한울아카데미.
- 이민부·김결, 2016, “통일지리학의 연구동향과 과제,” 대한지리학회지 51(6), pp.873-892.
- 이석기, 2009, 북한 기업관리체계의 변화, 운영관·양운철 편, 2009,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경제와 사회: 계획에서 시장으로?, 한반도평화연구원총서 2, 한울아카데미, 3장.
- 이승욱, 2016, “김정은 시대 북한의 경제특구전략: 영역화, 분권화, 그리고 중국식 개혁개방?,”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9(1), pp.122-142.
- 이승철·김부현·정수열·김민호·지상현, 2017, “북중 접경지역 단동의 대북 생산 네트워크의 예외적 성격,” 한국경제지리학회지 20(3), pp.331-354.
- 이영훈, 2007, 탈북자를 통한 북한경제 변화상황 조사,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 이진경, 2013, 노마디즘 1: 천의 고원을 넘나드는 유쾌한 철학적 유목, 휴머니스트.
- 임강택, 2013, 북한경제의 비공식(시장)부문 실태 분석: 기업활동을 중심으로,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13-11, 통일연구원.
- 임영호 편역, 스투어트 홀 저, 2015, 문화, 이데올로기, 정체성, 스투어트 홀 선집, 컬처북. (= Hall, S., 1996, *Critical Dialogues in Cultural Studies*, London: Routledge, Ch, 1, 4, 6, 7, 8, 13, 14, 15.)
- 임을출, 2016, 김정은 시대의 북한 경제: 사금융과 돈주, 한울아카데미.
- 정은이, 2009, “북한의 자생적 시장발전 연구: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를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52, pp.157-200.
- 정현주, 2018, “통일의 궁극적 지향점, ‘내적 통합’을 준비하는 지리학의 과제,” 2018 대한지리학회 연례학술대회 자료집, pp.39-40.
- 통계청 북한통계(<http://kosis.kr/bukhan/index.jsp>)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책 자료, 2018년 12월 기준.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statistics/>)
- 한국학술지인용색인 사이트 ‘분석정보서비스’ 활용(2019. 12.01. 검색 <https://www.kci.go.kr/kciportal/main.kci>)
- 홍민, 2010, “북한 시장일상생활 연구: 그로테스크와 부조리극 ‘사이’에서,” 박순성·홍민 편, 2010, 북한 일상생활 연구: 외침과 속삭임, 한울아카데미, 6장.
- 홍민·박순성 편, 2013, 북한의 권력과 일상생활: 지배와 저항 사이에서, 한울아카데미.
- Creed, G., 1998, *Domesticating Revolution: From Socialist Reform to Ambivalent Transition in a Bulgarian Village*, Penn State University Press.
- Jones, A., 2014, “Geographies of Production 1: Relationality Revisited and the Practice Shift in Economic Geography,” *Progress in Human Geography* 38(4), pp. 605-615.
- Kim, B.-Y., 2017, *Unveiling the North Korean Economy: Collapse and Trans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ee, R., 2006, “The Ordinary Economy: Tangled up in Values and Geography,”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31, pp.413-432.
- Massey, D., 2005, *For Space*, Sage Publications.
- Painter, J. and Goodwin, M., 1995, “Local Governance and Concrete Research: Investigating the Uneven Development of Regulation,” *Economy and Society* 24(3), pp.334-356.
- Pickles, J., 2010, “The Spirit of Post-Socialism: Common Spaces and the Production of Diversity,” *European Urban and Regional Studies* 17(2), pp.127-140.
- Round, J. and Williams, C., 2010, “Coping with the Social Costs of Transition: Everyday Life in Post-Soviet Russia and Ukraine,” *European Urban and Regional Studies* 17(2), pp.183-196.
- Schatzki, T. R., 1996, *Social Practices: A Wittgensteinian Approach to Human Activity and the Social*,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heppard, E. and Barnes, T., 1990, *The Capitalist Space Economy: Geographical Analysis After Ricardo, Marx, and Sraffa*, Unwin Hyman Ltd.
- Smith, A. and Stenning, A., 2006, “Beyond Household Economies: Articulations and Spaces of Economic Practice in Postsocialism,” *Progress in Human Geography* 30(2), pp.190-213.
- Smith, A., 2002, “Culture/Economy and Spaces of Eco-

- conomic Practice: Positioning Households in Post-Communism,” *Transactions of the British Geographers* 27, pp.232-250.
- Smith, A. and Rochovská, A., 2007, “Domesticating Neo-liberalism: Everyday Lives and the Geographies of Post-socialist Transformations,” *Geoforum* 38, pp.1163-1178.
- Stenning, A., Smith, A., Rochovská, A. and Świątek, D., 2010, *Domesticating Neo-liberalism: Spaces of Economic Practice and Social Reproduction in Post-socialist Cities*, Wiley-Blackwell.
- Yarker, S., 2017, “Everyday Economic Geographies,” *Geography Compass*, 11: e12324.(<https://doi.org/10.1111/gec3.12324>)

교신: 이승철, 서울 중구 필동로 1길 30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전화: 02-2260-3402. 팩스: 02-2285-3409, 이메일: leesc@dongguk.edu

Correspondence: Sung-Cheol Lee,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Dongguk University(Seoul Campus), 30, Phildong-ro 1-gil, Jung-gu, Seoul, Korea, Tel: 82-2-2260-3402, Fax: 82-2-2285-3409, E-mail: leesc@dongguk.edu

최초투고일 2019년 11월 29일

수정일 2019년 12월 19일

최종접수일 2019년 12월 23일